



발권력 동원을 통한 美국채 매입 검토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행(BOJ)이 10조 엔에 이르는 자금 방출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자 금융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외국 국채 매입 주장이 제기됨.

- 24일 BOJ가 발표한 금융정책회의 의사록 요지에 따르면 익명의 한 정책 위원이 중앙은행의 포괄적인 금융완화 정책에도 2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, 엔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기대수준 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외채 매입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.
 - 이는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 그 돈으로 달러화를 사들인 뒤 외국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나 조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.
 - 그러나 이런 조치는 엔고 해소와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어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.
- 현행법상 외환시장 개입 권한을 재무성에 한정하고 있어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임.

■ 한편, 이날 일본은행의 아마구치 히로히데 부총재는 경기 부양이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.

- 또한, 외환시장 개입이 금지 되어 있어 중앙은행이 직접 엔화가치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으나 환율 움직임과 관련, 필요시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임.
- 이에 현지 언론에서는 일본은행의 거부 반응에도 향후 정국¹⁾ 추이에 따라 외국채 매입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.

(아사히 외, 9/24)

1) 민주당은 '일본은행의 외국채 매입'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고 있으며, 자민당도 경제 분야 공약에서 대담한 금융완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외국채 매입을 요구, 필요시엔 일본은행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